

국민의당 동교동계 민주당과 통합론

대선 패배 후유증·호남 지지율 곤두박질에 내부 동요

지도부 “말도 안되는 소리”…내년 지방선거·개헌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통합론이 양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이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김민석 민주당정책연구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선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호평을 받으며 집권 여당이 기세를 올리는 반면,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내부에서 점차 동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통합론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및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둘 다 반대다. 이대로 다당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교동계 인사들이 통합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심경도 내비치고 있다. 발언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인사들이 동교동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권노갑 고문

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상징성도 없는 인사들의 정치적 오버”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대철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오히려 국민의당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통합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협치의 대상인 국민의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민석 원장은 동교동계 원로들과의 만남에 대해 “뿌리가 같은 원로들을 안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부터 통합의 밑자락을 깔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TBC 라디오에 출연해 “신뢰에 바탕을 두고서 결국 국가를 위해서 정당이 어떻게 재구성이 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의 통합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헌과 관련,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연정 및 통합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분열로 인한 패배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등 완승할 경우, 통합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하거나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통합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개헌과 지방선거의 파장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8월 전당대회 확정

주승용 백의종군 선언…비대위원 내일 확정

국민의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23일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앞서 알려진 대로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확정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서 중앙위 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위 소집을 의결했다”며 “25일 중앙위 폐회 직후 당무위를 다시 소집해 중앙위 결과를 추인하고 비대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장은 추대 형식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하려면 시간이나 절차 등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원장 추대가 유력했던 주승용 의원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당을 잘 승수려 줄 것을 주문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제가 나설 차례는 아닌 것 같다”며 “당원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결집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 등을 거론함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주 의원의 백의종군으로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로 국민의당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홍준표 이달말 귀국 당권 도전 시사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미국으로 갔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빠르면 이달 말 귀국,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홍 전 지사는 전날 “5월말에서 6월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측근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지사는 미국 체류 기간에도 페이스북에 ‘하루 한 건’ 꼴로 글을 올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현실 정치에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거나 “한국당은 쇠신돼야 산다. 이념적 지향점도 바꾸고, 지도부도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언

급으로 당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홍 전 지사는 전대에서 경선보다 추대 형태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홍 전 지사에 대한 ‘추대론’과 ‘추대 불가론’이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현재의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유지 여부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과 따로 뽑는다. 단독 후보로 등록하거나 다른 후보들이 중도 사퇴해 1명만 남으면 대표로 지명된다. 홍 전 지사는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력 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그에 맞설 만한 후보군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중소기업청·외교부·안전처 개편

정부 조직개편 윤곽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개편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힌 공약사항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약화된 통상 외교 기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된다.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총리 인사 청문회…전의 불태우는 한국당

‘강한 야당’ 입지 다지기

병역·탈세 등 송곳 검증 예고

김이수 현재소장 지명철회 요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사실상 첫 여야 대결 무대가 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강한 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줘 제1야당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은 물론 통합 분위기도 무르익는 상황이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들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그 서막을 보여주는 듯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요인 중 병역 면탈·위장 전입·탈세·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을 지녔다”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 뚜렷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깔아뭉개고 시간만 보내면 인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 주장을 다시 한번 제기한 것이다. 정 권한대행은 또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장녀의 이중 국적 및 위장전입 문제를 선(先)공개한 것에 대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 본인이 선언한 원칙을 본인 인사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수막, 중계카메라 설치 등 청문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기가 막히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가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불리한 내용은 논점을 흐리고 언론플레이하는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직전과 직후 공개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며 “약 두 달 만에 7000

여만원의 거액이 변제됐는데 이 못짓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자가 부인 그림 강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제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장장이나 도록(圖錄) 추진사에는 ‘국회의원 이낙연’이라고 대

문 짝만하게 적었으면서 구체적 검증에 들어갈 때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 회의 직후 논평에서 김이수 한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점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봤던 점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 ▶인 원 : 선착순 10명
- ▶비 용 : 100,000원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